

제 52대 학생회 총선거 마무리 선관위장 해임, 공약무단취득 발생

〈외국어대학〉 〈노하우 선본〉

이후승 기자 hooseung.lee@khu.ac.kr

지난달 28일 서울캠퍼스(서울캠) 청운관에서 진행된 개표를 마지막으로 양 캠퍼스 제 52대 학생회 총선거가 마무리됐다. 서울캠을 이끌어 갈 제 52대 총학생회(총학) 선거에서 기호 2번 무빙 선거운동본부(선본) 최인성(생물학 2016) 정후보와 정경원(회계세무학 2016) 부후보가 당선됐고 국제캠퍼스(국제캠)를 이끌어 갈 제 52대 총학 선거에서는 기호 2번 WORKHUMAN(워쿠맨) 선본 양성민(원자력공학 2015) 정후보와 이소영(체육학 2016) 부후보가 당선됐다.

국제캠 총학 선거 투표율은 64.8%였고 기호 2번 워쿠맨 선본은 58.8%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제 52대 서울캠 총학 선거에서는 예정된 개표일이었던 11월 29일에 투표율이 48.0%로 50%를 넘지 못해 투표가 하루 연장됐다. 그리고 다음 날 51.1%의 투표율을 기록해 개표가 진행됐다. 그 결과 기호 2번 무빙 선본이 43.8%의 득표율을 기록해 당선됐다.

양 캠퍼스를 이끌어갈 학생 대표자 선출로 모든 선거가 마무리됐지만 그 과정은 매끄럽지 못했다. 국제캠에서는 선거 기간 중 외국어대학(외대) 선거관리위원회 최지현(프랑스어학 2015) 위원장이 해임됐고 서울캠에서는 선본 간 공약 무단 취득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달 20일 국제캠에서 진행된 단과대학 및 특별대표기구 개표에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 이지는(산업경영공학 2015) 위원장은 외대 최위원장의 해임을 발표했다. 이 날 이 위원장은 “최 위원장이 선거준비기간 중 특정 선본 및 후보자를 지지하고 선거



에 개입 및 유착 관계 정황이 의심되는 제보가 왔다”며 “중선관위로서 정치·적·이념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선관위장 해임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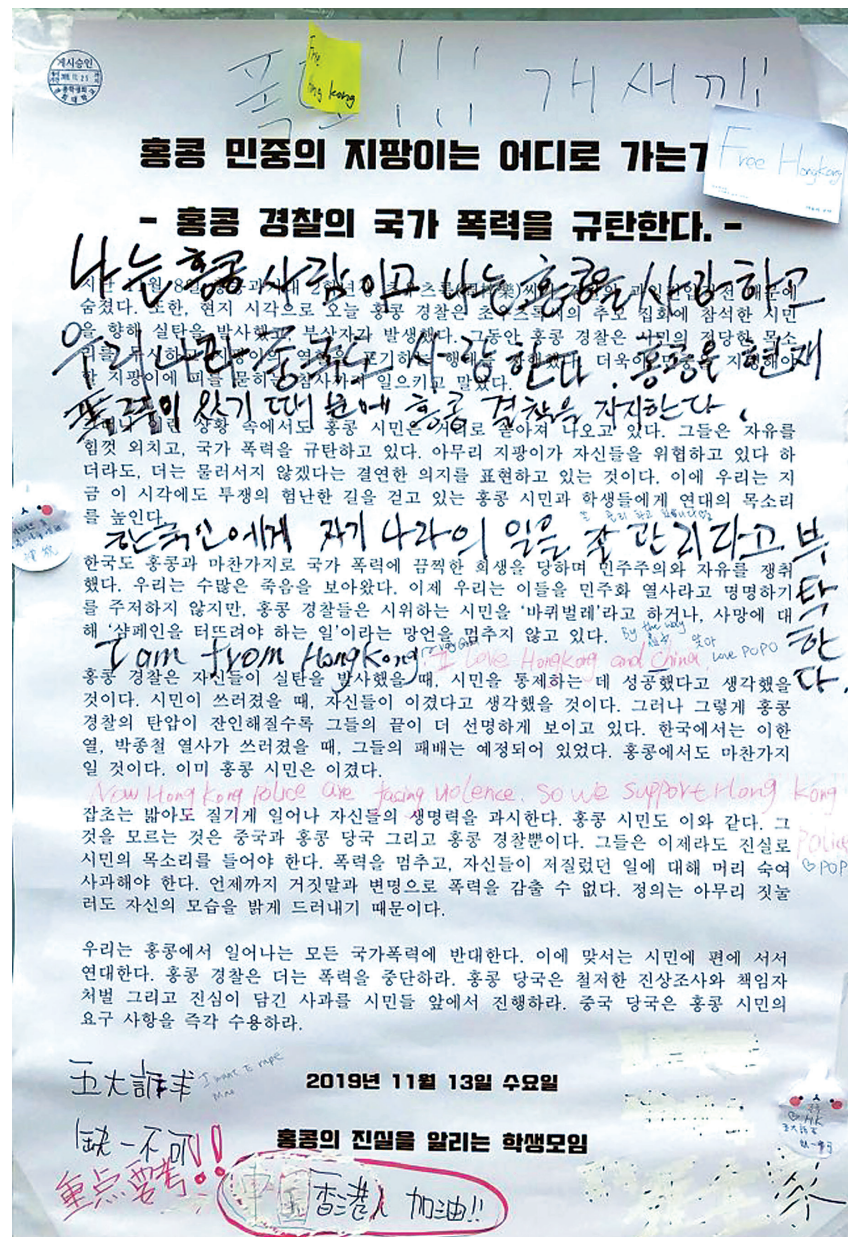
서울캠에서는 선본 간 공약 무단 취득 사건이 일어났다. 정경대학 문형일(정치외교학 2015) 회장은 제 52대 총학 선거 출마를 위해 ‘다음’ 선본을 꾸렸으나 정경대학 회장 사퇴 과정에 착오가 있어 출마가 불발됐다. 이후 다음 선본에 있던 일부 선본원이 ‘Know_How’(노하우) 선본으로 이동했고 그 과정에서 노하우 선본의 참모가 “노하우 선본으로 올 때 다음 선본의 정책을 갖고 올 수 있다”라는 농담을 던졌다. 그 결과 다음 선본의 5대 공약과 그 외 공약집 관련 파일이 노하우 참모진 대화방에 업로드 됐다. 대화방에 참여하고 있었던 노하우 선본 강연정(경영학 2017) 정후보와 전준필(경영학 2015) 부후보는 해당 파일이 업로드 된 사실을 인지했고 파일의 내용을 확인했다. 이후 파일의 열람을 금지하거나 폐기하는 등의 조치가 없었고 다음 선본 측에 선제적인 연락을 통한 조치를 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지난달 22일 다음 선본의 참모였던 김도엽(정치외교학 2016) 씨와 김병준(경제학 2015) 씨는 노하우 후보자가 위와 같은 부정한 습득 과정을 묵인해 도덕성과 자질에 의문이 든다며 대자보를 작성하고 배포했다. 이에 중선관위는 대자보 철거를 서면 경고로 공

지했다. 중선관위 김수혁(자율전공학 2016) 위원장은 “당시 대자보 철거 요구 근거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자보 작성 주체를 개인이 아닌 ‘선본’이라 칭했기 때문에 일반적 의견 개진으로 보기 힘들다는 것”과 “중선관위 의결 및 법적 자문 결과 목적의 방향이 무엇이 됐건 해당 대자보 표현으로 적어도 후보자를 낙선시키려는 의사로도 해석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후 지난달 25일, 대자보 내용의 공식적인 ‘확인(조사 혹은 수사 등)’과 그 결과에 따른 노하우 선본 제재 의결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제보가 중선관위 공식계정에 전달됐다. 중선관위는 다음 선본에 4개의 확인 질문을, 노하우 선본에는 25개의 확인 질문을 보냈고 현재 그 답변을 모두 받은 상태다.

김 위원장은 “수사와 징벌 관련 세칙이 중선관위에 없기 때문에 위 사항은 의결을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며 “노하우 선본 징계 논의가 지난달 22일 제3차 중선관위 회의에서 진행됐다”고 말했다. 다만 “노하우 선본에 징계를 내릴 수 있는 명확한 판단 기준, 세칙, 준거가 없어 의결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김 위원장은 본 사안에 대해 “확인 및 정리가 완료되는 대로 다음 선본과 노하우 선본에 보낸 확인 질문 관련 답변 게시 수준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훼손된 대자보 훼손된 의견

지난달 21일 서울캠퍼스 노천극장 앞 중앙 대자보 게시판에 붙어 있던 대자보가 훼손됐다. 해당 대자보는 ‘홍콩의 진실을 알리는 학생모임’이 게시한 것으로,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었다. (관련기사 3면)

퍼스널 모빌리티, 실효성 있는 수칙과 안전 인식 필요

박창원 기자 macpark342@khu.ac.kr

【국제】 최근 총무관리처에서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이용 안전수칙을 게시했다. 총무관리처 총무팀 이우휘 팀장은 “최소한의 도로교통법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안전수칙 게시의 배경을 설명했다. 퍼스널 모빌리티란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을 포함한 개인용 이동수단을 지칭하는 말이다. 하지만 이용객 급증에 따라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지난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사고는 528건이다. 총무관리처에 따르면 우리학교에서 공식적으로 퍼스널모빌리티 사고가 보고된 바는 없다. 그렇지만 우리학교에서도 무단횡단, 역주행, 2인 이상 탑승 등으로 인해 교내 운전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학교 측으로부터 안전수칙은 게시됐지만 이를 강제할 관계 법령은 없다. 대여업체 등에서 고지하는 수칙도 기초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면허증을 인증하지 않아도 간단한 회원가입만으로 이용할 수 있다. ‘지빌리티’ 관계자

는 “무면허 운전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도움을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수칙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된다. 평소 퍼스널모빌리티를 이용한다는 박주영(국제학 2018) 씨는 “전동킥보드를 대여할 때 헬멧이 구비돼있지 않아 쓰지 않고 탄다”고 말했다. 총무관리처 이 팀장은 “법적인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동킥보드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시설이 마련된 것도 아닌 상황이라 위험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가 도로교통법을 인지하고 준수해 이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면안내

대자보 훼손, “홍콩경찰 지지한다”
홍콩 시위 지지 대자보 훼손

» 3면

대학 특성 못 살리는 지표…내실 기하는 ‘참고’ 삼아야
2019 중앙일보 대학평가 세부 지표 분석

» 6면

“이제는 새로운 총장과 함께 미래를 가꿔나가야 할 때”
임기 마지막 앞둔 박영국 총장 직무대행 인터뷰

» 8면

알림

※ 이번 호가 2학기 종간호입니다

시선

사설

무계감 사라진 제 52대 학생회 총선거

서울캠퍼스(서울캠)와 국제캠퍼스(국제캠) 제 52대 학생회 총선거가 마무리됐다. 양 캠퍼스 모두 경선이었던 만큼 치열한 선거 운동 기간을 거쳐 2020년의 학생 자치를 끌어갈 대표자를 학생 손으로 무사히 선출했다.

결과는 나왔다. 하지만 그 결과가 나오는 과정이 무사하지 못했다. 그 과정을 짚지 않고 넘어갈 수 없다. 이번 선거 과정에 양 캠퍼스에서 발생한 논란은 썩 좋지 못한 뒷맛을 남겼다. 먼저 국제캠에서는 지난달 20일, 선거 기간 중 외국어대학(외대) 선거관리위원장(선관위장)이 해임됐다. 외대 선관위장이 선거준비기간 중 특정 선본 및 후보자를 지지하고, 선거 개입 및 유착 관계를 의심케 하는 정황의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가장 공정하게 선거를 진행하도록 힘써야 할 선관위장의 해임 그리고 그 사유가 선거 개입 및 유착 관계 정황의 포착이란 점은 그 자체로 실망감을 안기기에 충분했다. 또한 해임 이후 어떠한 입장도 없었다는 점도 구성원의 실망감을 더했다. 선관위장이 갖는 직책의 책임감을 충분히 느꼈다면 중립을 위해 몇 번이고 신중하게 고민했어야 할 이 틀림없다.

서울캠에서는 선본 간 공약 취득과 관련한 논란이 일었다. 출마가 무산된 한 선본의 참모가 타 선본으로 소속을 변경하며 기존 선본 공약집을 공유한 것이다. 정황을 살펴보면 소속을 변경할 때 공약집도 함께 가져오라던 한 선본원의 농담이 있었다고 전해졌다. 농담으로 해야 할 말과 그러지 않아야 할 말을 구분하지 못한 선본원이 한 해 동안 학생 자치를 이끌어갈 선거의

무계감을 느꼈을 리 만무하다. 심지어 공약집이 공유된 이후에도 공약을 받은 선본의 출마자조차 이를 확인한 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단 것은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다. 선거에 대한 무계감 부재가 단지 일부 인원에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최근까지도 민주적으로 총장을 선출 하겠다며 목소리를 내던 학내 분위기를 감안하면 이번 학생회 총선거 과정은 아쉬움을 더할 뿐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며 신뢰와 공정성을 바탕으로 대표자를 뽑는 절차다. 소단위인 학생 자치조차 구성원의 대표자를 뽑는 과정에서 논란과 잡음이 이어진다면 학생 대표자에게 목소리를 전달해 이어나가야 할 추후 총장 후보 선출 선거까지 불안요소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

최근 치러진 홍콩 구의원 선거는 범민주파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다. 그 결과 분쟁 속 시위를 강하게 진압하던 홍콩정부의 강경 기조는 일부나마 완화될 수 있었다. 대표자를 뽑는다는 건 국제관계의 흐름까지 좌우할 정도로 결코 가벼울 수 없는 과정이다. 그 단위가 대학의 학생 자치로 좁혀진다고 할지라도 조직을 끌어갈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점에서 본질과 중요성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잡음 없는 공정한 선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선거의 무계감을 간과하지 말고 2020년 11월에 진행될 제 53대 학생회 총선거부터라도, 혹은 2020년 3월에 진행될 재보궐 선거에서라도 개선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만평 - 경희특 설치율 저조 및 홍보 부족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2)

발행인 박영국 | 편집인 조영숙 | 편집장 이후송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주) | 구독료 1년 1만원 | 구독 02-961-0093-4
주소정정 02-441-7317(미래기획) |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외기동) /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역삼로 1732(서현동) / Tel 031-204-3330-2, FAX 031-204-8121

언제까지 법은 아이의 이름이어야 하나

세시봉

이서림 <국제뉴스팀장>



수년째 우리 사회에 표류하고 있는 이름 여러 개가 있다. 그리고 최근 또 다른 이름 하나가 인터넷에 등장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그 이름은 ‘김민식’이다. 이 아이는 지난 9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나 하늘로 떠났다고 한다. 이전에는 하준, 해인, 한음, 태호, 유찬이가 있었다. 관련한 법이 3년 넘게 계류 중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그동안 우리 사회가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경사진 주차장의 차량이 추락하면서, 응급조치가 늦어져서, 동승자의 방치로 인해, 법이 규정한 정식통학차량이 아니라는 이유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등 사고의 원인은 다양하다. 심지어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해야 하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조차 안전을 위협받았다. 사고의 원인이 다양하다는 것은 안전한 사회로 가는 길이 아직 멀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처럼 가슴 아픈 사고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린이생명안전법안 제정 및 도로교통법 개정이 시급하다.

여러 사고로 발의된 개정안은 어린이 응급처치 의무화, 통학버스 정차

시 양방향 차로 진행 차량 정지, 어린이 차량 관리 강화, 어린이보호구역 과속카메라 의무화 등 대체로 기본적인 내용이다. 기본적인 법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 아쉬울 뿐이다. 이에 지난 27일 어린이 안전 관련 법안이 대통령 지시 한 마디에 국회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를 통과했다. 부모들이 거리에 나서 청원했던 3년간의 시간이 무색해질 만큼 빠른 결정이었다. 연이어 28일 행안위에서 ‘어린이 안전기본법 제정안’(해인이법), 도로교통법 개정(태호·유찬이법)의 일부 내용이 의결됐고 당초 29일 전체회의에서 추가 논의와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그러던 중 필리버스터가 신청됐다. 한 정당 대표는 현 상황을 저지하기 위해 어린이생명안전법안을 조건으로 달았고 여야 간 이해관계가 상충되자 본회의는 무산됐다. 치열히 다투는 틈에 민생 법안 입법은 요원해졌다. 본회의에 상정되기로 한 안건 의결은 사실상 무기한 연장 상태며 이외의 일부 법안은 여전히 계류 중인 상황이다.

더욱이 한 국회의원의 발언은 귀를 의심케 한다. 지난 28일 유가족의 질문에 이 국회의원은 “법 하나 만든다고 해서 사고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법도 법이지만 모든 국민과 어린이들이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

했다. 물론 법 하나가 모든 사고로부터 국민을 온전히 보호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강제할 힘이 있다. 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던 위험한 환경을 개선할 수 있으며 끔찍한 사고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 여태껏 발생했던 사고는 아이들이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했던 사고가 아니었다.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의원들이 어린이법을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는데 이용하거나 안일한 태도로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

여태껏 기본적인 안전조차 보장되지 않는 사회를 바꾸려고 노력해 온 주체는 부모였다. 언제까지 부모가 나서서 자식의 이름으로 법 개정을 요구해야 하는가. 현재 어린이생명안전법안의 다른 이름은 여러 가지다. 그동안 많은 사례를 단순히 교통사고로 치부하고 수칙을 지키지 않은 탓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던 탓에 어린이생명안전법안의 이름은 늘어만 갔다. 제도가 미비한 현 상황을 미온적으로 바라보고 잘못을 피해자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 또한 아이들의 이름이 정치에 쓰여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이 법안의 이름이 늘어나지 않기를 희망한다. 국민의 안전을, 특히 어린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다. 안전한 나라를 위해 어린이생명안전법안이 하루빨리 국회 문턱을 넘기를 바란다.

대학평가, 무시하기에도 주목하기에도

취재수첩

김수혁 기자
sherko@khu.ac.kr



얼마 앞서 언론사 대학평가의 악영향을 우려하는 내용의 기사를 발행한 바 있다. 그 기사에는 “평가순위 상승했다고 경마식 보도를 냈던 대학주보가 이런 기사를?”이라는 댓글이 달렸다. 타당한 지적이다. 그런데 그로부터 시간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언론사 대학평가를 비판하는 다른 기사가 나오고 그 앞에는 또다시 순위평가 결과를 알리는 기사가 나온다.

언론사 대학평가에 대한 이런 미묘한 태도는 비단 우리 신문만의 일은 아닌 모양이다. 순위평가 관리업무 담당 부처의 관계자는 교수, 직원, 학생, 동문을 막론하고 언론사 대학평가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해악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정작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비판이 쏟아지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정책 수립이나 조정을 위해 개별 부서나 단과대에 협조를 요청할 때도 평가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면 설득이 훨씬 수월해진다고도 말했다.

사실 얼마나 매력적인가. 전국의 주

요 대학을 통일된 기준에 따라 일렬로 줄 세워 알려준다니. 한눈에 보기 쉽고, 무엇보다 재미있다. 눈만 돌리면 어디서나 이리저리 늘어진 줄을 볼 수 있다. 공부 잘 한 학생 순위, 많이 들은 노래 순위, 많이 본 영화 순위, 많이 읽은 책 순위, 게임 점수 높은 순위, 심지어 인기 있는 아기 이름 순위까지 있다.

줄 세우기는 대상을 패턴화하는 사고방식의 일종이다. 인간은 복잡하고

“
순위를 발표하는 데는 한 줄이면 충분하지만 문제를 지적하자면 구구절절한 설명이 필요하다”

다양한 변수로 가득한 세상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유사한 것들을 한 데 묶고 다른 것들을 구분 지어 우선순위에 차등을 매기는 방식을 사용한다. 대상의 속성을 있는 그대로 소상하게 파악한 뒤에 판단을 내리자면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인간의 삶이란 크고 작은 선택으로 빠르게 돌아다닌다. 오늘부터 모든 선택에 앞서 심오한 고찰의 과정

을 거치려고 한다면 다음 식사 메뉴를 선택하기도 전에 굶어 죽을 것이다. 줄 세우기가 그토록 인기 있는 이유는 결국 판단의 참고자료가 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줄 세우기를 좋아하는 만큼 학벌을 중시하는 풍토가 강한 우리 사회에서 대학을 대상으로 한 일렬 순위평가는 사실 예정된 히트상품이나 마찬가지였을 테다.

문제는 실제 세상은 순위표에 나와 있는 간결한 숫자와 달리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곳이라는 사실이다. 어떤 대학이 전국에서 몇 위라고 말하는 데는 단 한 줄이면 충분하지만, 그 주장이 사실과 다르거나 순위를 매기는 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말을 하려면 구구절절한 설명이 필요하다. 저녁에 어떤 영화를 볼지 고르러 가야 하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끝까지 참고 들어줄지 차치하고서라도 말이다.

결국 언론사 대학평가를 둘러싼 논란은 매년 같은 양상이 반복되는 모양새다. 대학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의심스럽고 불편한 시선으로 그 표를 바라보고, 더 이상 주목하지 말자는 이야기도 해 보지만 ‘올해 당신이 속한 어느 학교는 전국 몇 위’라는 한 문장은 무시하기에는 너무나 위력적이고 매력적이다.

대자보 훼손, “홍콩 경찰 지지한다”

〈홍콩 시위 지지〉

장보경 기자 jbg9687@khu.ac.kr

우리학교에서 홍콩 시위 지지 대자보가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달 21일 서울캠퍼스(서울캠) 노천극장 앞 중앙 대자보 게시판에 붙어 있던 대자보가 훼손됐다. 해당 대자보는 ‘홍콩의 진실을 알리는 학생모임(학생모임)’이 게시한 것으로,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학생모임은 ‘홍콩 경찰의 국가 폭력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대자보를 통해 홍콩 민주화 시위의 현황을 알렸다. 이들은 대자보에서 “홍콩 경찰은 시민의 정당한 목소리를 무시하고 지팡이의 역할을 포기하는 행태를 자행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홍콩 시민들은 자유를 힘껏 외치며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도 홍콩과 마찬가지로 국가 폭력에 끔찍한 희생을 당하며 민주주의와 자유를 쟁취했다”며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을 언급했다.

더불어 “중국과 홍콩 당국, 홍콩 경찰들은 폭력을 멈추고 자신들이 저질렀던 일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며 “힘난한 투쟁의 길을 걷고 있는 홍콩 시민들에 연대의 목소리를 높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대자보는 자신이 홍콩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이에 의해 훼손됐다. 대자보에 반대하는 의견을 검은 매직펜으로 덧쓴 것이다. 그는 “나는 홍콩 사람이고 나는 홍콩을 사랑하고 우리나라 중국도 사랑한다”며 “홍콩은 현재 폭력이 있기 때문에 홍콩 경찰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인에게는 한국의 일부터 잘 관리하길 바란다”는 내용의 글도 썼다.

중앙 대자보 게시판뿐만 아니라 청



청운관 1층 게시판에 붙어 있는 홍콩 시위 지지 대자보가 훼손되어 있다.

운관 1층 게시판에 붙어 있는 홍콩 시위 관련 대자보에는 반대 의견이 적힌 종이와 포스트잇이 덧붙여져 있었다. ‘홍콩 민주화 시위를 지지합니다’라는 내용의 글 위에 붙어 있는 종이에는 ‘Stop interfering in China’s internal affairs(중국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 혹은 ‘One China’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에 대해 서울캠 총학생회(총학)는 대자보 훼손 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총학은 “대자보 훼손은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가로막는 심각한 행위”라며 “타인의 의견 개진을 탄압하는 폭력적인 방식으로 의사표현이 행해져선 안 된다”고 전했다. 또한 향후 대자보 훼손 행위가 반복될 경우 관련 조항에 근거해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을 밝혔다.

이선민(언론정보학 2018) 씨는 “우리 모두는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자유를 가진다”며 “대자보를 훼손함으로써 타인의 의견을 억압하는 행위는 옳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유혜리(철학 2018) 씨는 “의견의 옳고 그름을 떠나

서 원칙에 어긋난 방법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자보 훼손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반면 중국인 유학생 A(경영학 2017) 씨는 “홍콩 경찰을 비난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보고 화가 났다”며 “한국 학생들이 진실을 정확히 알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자보가 훼손된 행위에 대해서는 “우선 대자보가 부실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그것을 훼손한 행위 자체는 비이성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화가 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 학생들에게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 것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한편 연세대학교, 한양대학교, 세종대학교 등에서도 홍콩 시위 지지 대자보가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들 가운데는 경찰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 25일에는 서울지방경찰청 이용표 청장이 “최근 5개 대학에서 7건의 신고 또는 고소장을 접수했고, 중국인 유학생 5명을 입건했다”고 밝힌 바 있다.

2019 중앙일보 대학평가 6위 자연과학, 계열별 10위 밖

김창호 기자 k.c_hoxx@khu.ac.kr

‘2019 중앙일보 대학평가’ 결과가 발표했다. 중앙일보 대학평가팀에 따르면 우리학교는 최근 10년간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 과거 종합평가 10위권에서 6위에 오른 바 있다. 전임교원 확보와 국제화에 주력해 교육여건을 개선한 결과다.

이번 중앙일보 대학평가는 국내 주요 4년제 대학 56곳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종합평가는 인문·사회·자연과학·공학·의학·예체능 6개 계열 중 4개 이상을 보유한 50개 대학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때문에 KAIST(한국과학기술원)와 포스텍(포항공과대학교) 등 이공계 특성화 대학은 종합평가에서 제외됐다.

평가는 교수 연구 부문의 10개 지표가 총합 100점, 교육 여건 부문의 12개 지표가 총합 100점, 학생 교육 노력 및 성과 부문의 6개 지표가 총합 70점, 평판도 부문의 5개 지표가 총합 30점으로 구성됐다. 총 4개 부문에 걸쳐 33개 지표, 300점 만점으로 이뤄졌다.

우리학교는 교육 여건 부문에선 55.2점으로 고려대와 공동 6위, 평판도 부문에선 21.7점으로 서강대와 공동 7위의 점수를 받았다. 이는 작년 대비 순위가 2단계 상승한 결과이다. 교수 연구 부문에서는 58.4점으로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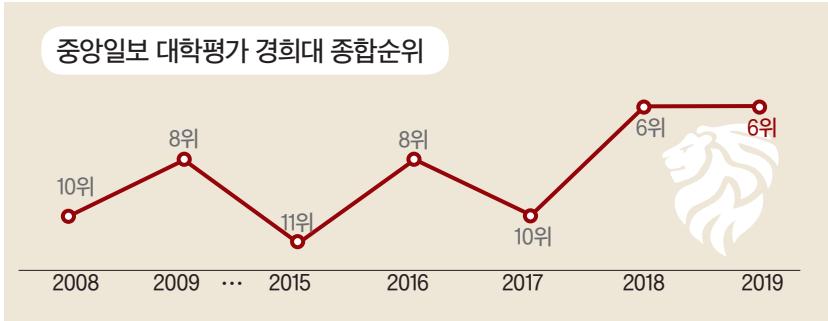
위를 기록했고 학생 교육 노력 및 성과 부문에서는 12위를 기록했다.

인문·사회·자연과학·공학 등 4개 계열별 순위를 매기는 계열평가에서는 인문계열에서 220점 만점에 126점으로 10위, 사회계열에서 240점 만점에 152점으로 6위로 모두 작년 대비 1단계씩 하락한 모습을 보였다. 공학 계열에서 역시 270점 만점에 163점으로 작년 대비 7점 하락한 9위의 성적을 기록했다. 자연과학 계열에서도 10위 안에 들지 못했다.

기획조정처 학술진흥팀에서는 “지표 실적으로는 아쉬움이 남지만 교육비 지급률, 도서 자료 구매비, 기숙사 수용률 등에 있어서도 전년 대비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말했다. 또 “LINC+사업 선정 이후 지속적인 창업 프로그램 확대, 현장실습 지원 시스템 구축 및 기업 확대를 통한 파견 학생 확대, 지속적인 교원초빙과 유학생 확대 등에 따른 실적으로 판단된다”고 얘기했다.

이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장학금 비율, 기숙사 수용률, 학생당 도서 자료 구입비 개선, 유학생 어학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며 “교수연구 지원 및 업적평가 제도 개선을 논의, 학생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선을 계획 중에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6면



출시 한 달 넘은 경희톡 설치율 20%, ‘기능 부족’ 지적 잇따라

정유나 기자 yunaight@khu.ac.kr

정보처에서 “쌍방향 소통 기능”을 내세우며 경희톡을 공개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다. 정보처는 지난 9월 기존 KHU 알리미에서 발전된 형태로 개간에 맞는 피드가 구성돼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인 경희톡을 출시했다. 하지만 여전히 경희톡의 기능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홍보도 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경희톡 설치율은 20.1%로 저조한 편이다.

경희톡은 기존의 KHU 알리미 기능에 수강정보와 자료를 연동해 수업 구성원 간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다. 같은 수업을 듣는 학생끼리 조별 과제 등을 수행할 때 연락처를 주고받는 번거로움이 사라질 것으로 보였다. 그 외에도 학생끼리 자유롭게 위

크 그룹을 만드는 기능도 추가됐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기능은 잘 운영이 되고 있지 않았으며 경희톡을 사용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학생들은 되려 경희톡이 무엇이나고 다시 질문했다.

윤다운(응용영어통번역학 2019) 씨는 “KHU 알리미 말하는 것이냐”고 답하며 아예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유진(수학 2019) 씨는 “알긴 알지만 설치를 하지 않았다”며 “같은 수업 듣는 사람끼리 단톡방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고만 했다. 최고는(Hospitality경영학 2019) 씨는 “설치는 하였으나 제대로 써본 적이 없다. 배분이수 교양 교수님께서도 클래스를 확인하라는 내용의 알림만 보내는 것으로 딱 한 번만 사용하셨다”며 어플의 존재감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경희톡의 맨 오른쪽 밑을 클릭하면 같은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명단과 연

락처가 뜬다. 이름 옆에 초록색 점이 있으면 경희톡을 설치한 것이고, 회색 점이 있으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설치를 한 학생보다 설치를 하지 않은 학생이 훨씬 더 많았다.

또한 경희톡의 ‘연락처 연동’ 기능은 사용자가 연락처 공개 허용을 해야 공개가 된다. 그러나 대다수의 학생들은 개인정보 노출이나 신상정보 공개에 두려움을 느껴 연락처 공개 비허용으로 해놓는 경우가 많았다. 최 씨는 “연락처 연동 비허용으로 해놓았다. 잘 모르는 사람이 나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무서웠다”고 말했다. ‘연락처 연동’ 기능은 ‘독강’ 혹은 ‘조별과제’시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라는 정보처의 기대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사용이 되지 않고 있다.

경희톡(‘경희talk’)에 걸맞는 기능이 없는 것도 지적됐다. 연락처 연동

이 되지 않는다면, 어플 내에서 실시간으로 소통 가능한 기능이 있어야 하지만 경희톡 어플 내엔 그러한 기능이 없다. 최은(Hospitality경영학 2019)씨는 “조별과제 때 실제로 사용해본 적이 없다”며 “경희톡이라고 해서 카카오톡 같은 기능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없어서 당황했다”고 말했다.

그룹을 만들어서 게시글을 올리고, 댓글을 달거나 공감을 누를 수는 있지만, 이러한 ‘피드형 타임라인’은 끊임 없이 의견을 주고받아야 하는 조별과제의 경우와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학생들은 경희톡이 있음에도 이전과 별 다를바 없이 번호를 물어보고 ‘단톡방’을 만들어야 했다.

이대호(소프트웨어융합학) 교수는 “경희톡 기능을 교수가 직접 안내하고 사용할 수 있으나, 기존 스마트폰 메신저를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

기 때문에 사용률이 낮을 것”이라며 경희톡 기능 일부를 지적했다. 또한 이 교수는 “인포21과 알라딘 등에서 이메일 전송 및 SMS 전송 기능의 추가 및 관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 교수는 “아직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직접적인 사용자인 교수 및 학생들의 관점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사용자들의 요구 사항을 명확히 파악하고, 사용자 관점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대폭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울캠퍼스 정보기획팀 최정인 과장은 경희톡 설치율이 기대보다 낮아서 더욱 활발히 홍보를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최 과장은 “조만간 인포21 로그인 화면에 경희톡 홍보 팝업창을 띄워 설치율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능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사용자들의 요구에 맞춰 추가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집

마무리 앞둔 총장선출, ‘다음’을 위한 성찰 필요

김지원 기자 kjw990327@kh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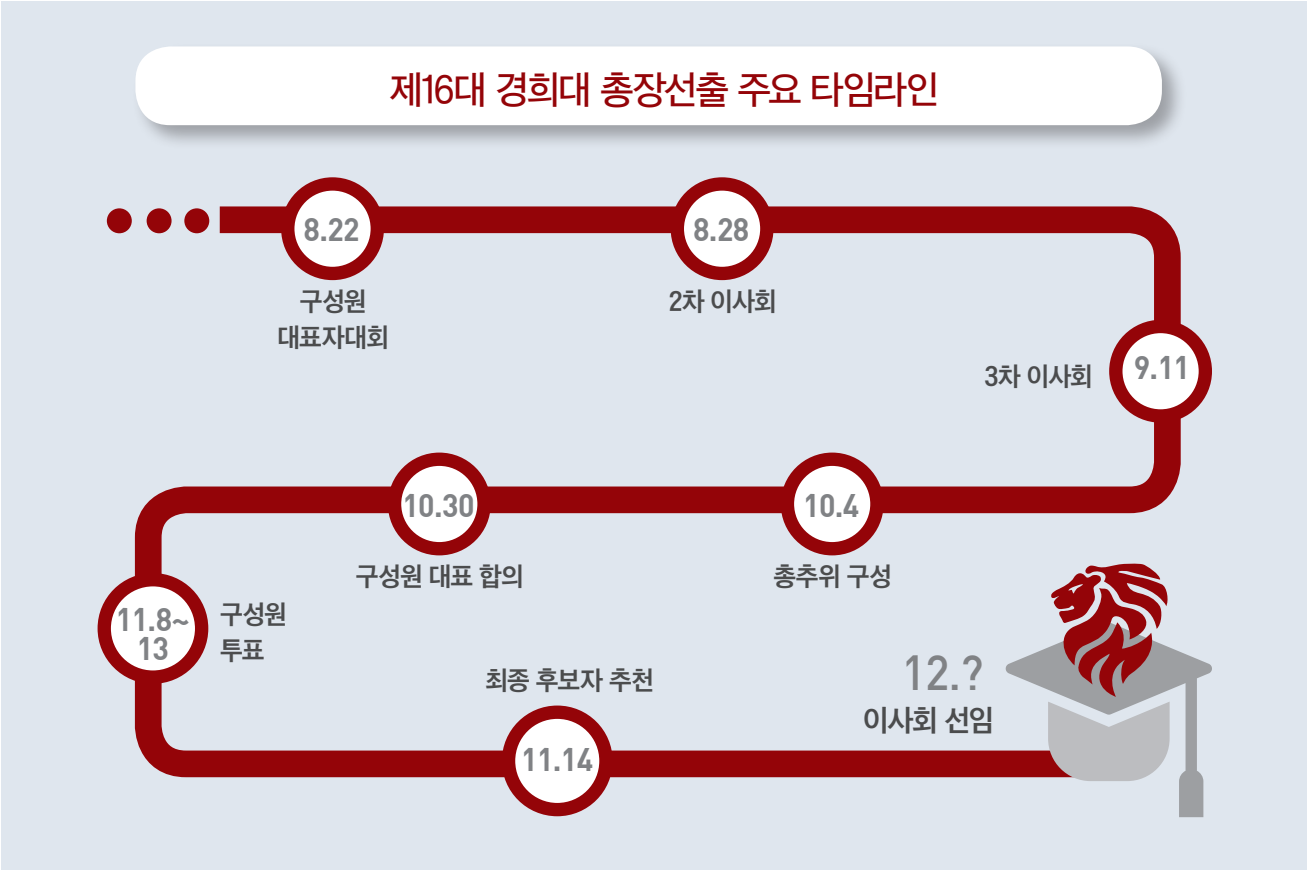
지난달 14일 구성된 손으로 뽑은 총장 후보가 발표됐다. 이로써 제 16대 경희대학교 총장선출 프로세스는 그 마지막 단계인 이사회 선임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민주적 총장선출에 대한 요구가 처음 제기됐다고 할 수 있는 지난 2014년부터를 굽어보면 긴 시간 이어온 논의가 곧 결실을 맺는 것이다.

교수의회 강재식 의장은 “70년 경희 역사상 최초라는 기대감과 무게감에 구성된 단체와 학교 당국 대표들이 큰 사망감을 갖고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이는 경희 역사에 한 획을 그은 것으로 그 과정에서 우리 스스로가 얻은 경험과 지혜는 향후 경희 발전에 훌륭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1노조 한상 위원장 역시 “경희 70년 역사에서 최초로 구성원 투표에 의한 총장 후보가 추천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며 총장선출 과정이 갖는 가치에 공감했다.

구성원 대표, 사상 첫 민주적 총장선출 가치에 입 모아

국제캠퍼스(국제캠) 총학생회(총학) 전완주(일본어학 2015) 회장이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결국 마무리를 지었기에 곧 우리 손으로 뽑은 총장이 선임될 것”이라며 “‘첫 번째’를 해냈으니 다음도 있을 텐데 부디 다음 번 총장선출은 더 성숙한 모습이길 바란다”고 전했다. 사실상 모든 구성원 대표가 ‘다음’이 있다는 점에서 이번 총장선출이 더욱 의미를 가진다는 데 입을 모았다고 볼 수 있다.

그간 우리대학은 교수와 직원 등 일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선임 투표를 진행했던 사례도 있었지만 사실상 총장선출은 법인 이사회의 선임으로 이뤄



져 왔다. 하지만 이번 총장선출은 후보 추천과정에서 구성원 전체의 참여를 보장했다.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를 교훈으로 삼은 우리대학이 대학의 대표를 뽑는 과정에도 민주화 정신을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처음은 누구나 서툴다’는 말처럼 사상 처음으로 치러진 총장선출은 그 논의 과정에서 투표반영비율, 선출방식, 시행세칙 등의 다양한 문제들을 두고 갈등을 겪었다.

이에 서울캠퍼스(서울캠) 총학 김수혁(자율전공학 2016) 회장은 “소통 단위가 많고 각 단위 대표의 임기가 상이하면서 의견 합일이 어려워 여러 문제가 생긴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경희 구성원이라는 전체 범위에서가 아니라 각 구성원 단체에 초점이 맞춰져 논의가 진행됐다는 점이 근본적인 원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총장 선출 논의 초기에는 ‘경

희대학교에는 어떤 총장이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 의지도 존재했다”며 “그러나 각 집단의 차원에서 논의를 이어가다보니 투표반영비율이나 선출방식과 같은 절차적 문제로 방향이 쏠린 것 같다”고 그 배경을 분석했다.

많은 갈등 원인은 공동이 아닌 각 단체에 초점 맞춰진 까닭

실제로 박영국 직무대행은 총장선출 과정이 급박하게 진행된 점을 가장 아쉬운 점으로 들며 “우리대학에 적합한 총장상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이를 위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교수의회 강 의장 역시 “발견된 총장선출제를 위해서는 공통의 목표와 경희정신에 기반한 총장상을 도출해 이를 위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과열된 논의 중 받은 상처, 문제점, 긍정적 부분을 성찰하고 보완하는 자

리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캠 총학 전 회장은 “다음 총장선출에서는 우리대학을 잘 이끌 총장은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이뤄져 내부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후보를 물색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어떻게 뽑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총장을 뽑고자 하는가’를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갈등이 빈번히 일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갈등이 장기화 된 데에는 갈등관리 체계가 미비했다는 문제점도 있다. 실제로 총장선출이 급박하게 이뤄진 데에는 구성원 합의가 오랜 시간 이뤄지지 못한 까닭도 있다. 당초 논의되던 1안에서 구성원 간 투표반영비율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2차 이사회가 별다른 의결 사안 없이 끝났고 결국 3차 이사회에 이르러서야 2안이라는 새로운 선출방식이 의결됐기 때문이다.

이에 제1노조 한 위원장은 “이견 조율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 일관성이 결여된 것이 가장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논의 중이던 제도를 새로운 제도로 변경하는 과정에서는 학내 구성원 대표 간 과반수 동의 절차를 거쳤지만, 직원 구성원 간 투표반영비율에 대해서는 전체 동의를 요구했다”며 “이후 최종적으로는 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과반수 동의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명확한 기준 없이 만장일치와 과반수 동의 사이에서 시시각각의 결 기준이 바뀐 것이다.

갈등 장기화 원인은 갈등관리 체계의 미비

이에 서울캠 총학 김 회장은 “어떻게 의결할 것인가와 더불어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범위에서 의결할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았다”며 “어떤 문제는 직원 간 결정하도록 하고 또 어떤 문제는 다 같이 논의하도록 하는 등의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국제캠 총학 전 회장은 “이밖에도 갈등 상황에서 대화를 단절하고 성명서와 대자보를 통해 의견을 피력하는 등의 모습도 기준 부재와 연관이 있는 것 같다”며 갈등 해결을 위한 기준이 부재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소통이 이뤄지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이밖에도 서울캠 총학 김 회장은 “전체의 의견 반영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학생, 직원, 교수 등 각 단체가 가진 특성을 고려해 해당 단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1노조 한 위원장은 “다음 총장선출에서는 선거 전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규정과 시행세칙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견을 이야기했다.

지금 뭐할 때?

국가장학금 신청할 때!

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11.19.(화) 9시 ~ 12.17.(화) 18시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11.19.(화) 9시 ~ 12.19.(목) 18시

신청대상 재학생, 신입생, 입학예정자(현 고3, 재수생 등),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신청문의 1599-2000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www.kosaf.go.kr 접속 후 신청

QR코드를 스캔하세요!

신청방법

- 신청 다음날 홈페이지에서 제출 필요서류 확인 후 온라인으로 제출
-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장학금 신청현황 > 서류제출에서 제출서류 확인 가능

[서울C] 2020-1학기 교내장학 신청 안내

신청기간 및 대상

- 신청기간 : 2019.12.09.(월) ~ 2020.01.12.(일) 24:00 [5주간]
- 대상장학 : (성적)우수, 우정, 밝은사회, 실기, 계속장학(임시/보훈/북한이탈주민/경희가족/고시 등)
- 신청대상 : 정규학기 학부 재학생 전체

신청방법

구분	내용
신청 방법	인포21 → 등록/장학 → 장학신청 → 2020-1학기 교내장학 신청 (* 학자금 조달방법 : 장학금 선택, * 동행장학금 : 학생 선택 사항) ※ 신청 후 장학신청 확인을 조회하여 장학신청이 완료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
서류 제출처 (해당자에 한함)	- 장학신청서 : 휴대폰번호, 등록제외정보 없음 경우 신청이 되지 않음 (개인정보변경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변경' → '제외정보변경' 에서 변경 정보 입력 후 신청할 것) - 장학신청서는 온라인에서 작성하며 별도 제출 불필요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 (성적)우수장학 : 어학성적 증빙 등 ※ 단과대학별 별도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소속 단과대학에 확인한 후 서류를 제출할 것 - 고시장학(신규) : 고시 합격증명서 1부 ※ 서류제출기간 : 2020.01.20.(월) 09:00 ~ 01.22.(수) 17:30
장학지원센터 (청운관 1층)	- 장애학생(신규) : 장애인 등록카드 사본 1부
학생지원센터 (청운관 1층)	- 보훈장학(신규) : 대학입학금 및 수업료면제대상자증명서(보훈지정 발행) 1부,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급자외의 관계증명서류 1부, 본인 신 분증 사본 1부 ※ 서류제출기간 : 2020.01.06.(월) 09:00 ~ 01.17.(금) 17:30 ※ 기존 보훈 계속장학생은 별도 서류 제출 없음 ※ 보훈장학(신규) 대상자 여부는 보훈지정(02-944-9217)으로 문의 - 경희가족장학(신규) : 보호자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서류제출기간 : 2020.01.20.(월) 09:00 ~ 01.22.(수) 17:30

선발기준 자격기준

- 2020-1학기 기준 정규학기 재학생
- 직전학기 평균평점 2.0 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의약학계열 15학점) 이상

유의사항

- (성적)우수장학 장학생은 교내장학 신청자에 한하여 선발함 ※ 교내장학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성적)우수장학 수혜불가
- 우정장학 수혜희망자는 2020-1학기 국가장학금(1차)을 반드시 신청해야 함 ※ 국가장학금 신청자에 한하여 우정장학을 지급함 ※ 2020-1학기 국가장학금(1차) 신청기간 : 2019.11.19.(화) 09:00 ~ 12.17.(화) 18:00
- 교내 계속장학생(임시/보훈/북한이탈주민/경희가족/고시 등)도 반드시 교내장학을 신청해야 함
- 장학규정에 의거하여 장학금은 신청자에 한하여 지급되며 신청기간은 절대 연장불가함
-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2020-1학기 미등록시 해당 장학은 선발이 취소됨 ※ 2020-1학기 휴학 예정시 휴학 전 등록금고지서 장학내역을 필히 확인한 후 등록휴학/미 등록휴학 여부를 결정하기 바람
- 직전학기 교환학생/경기현장연수생일 경우 9학점 이상 이수(Pass)한 경우에 한해 장학 수혜 가능
- 전과생의 경우 전출(전입) 학기에 전출(전입) 학부(과)에서 선발하는 (성적)우수장학 수혜 불가 (단, 우수장학 외 타장학은 수혜가능)
- 2020-1학기 복학생, 신·편입생, 재입학생은 학기 개시 후 별도의 우정장학 신청요망 ※ 단, 2020-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필수

장학지급방법

- 등록금 지원 장학 : (학기개시 전) 등록금 고지서 감면 / (학기개시 후) 계좌이체 또는 대출상 환 ※ 고지서감면의 경우 납입액이 '0원' 인 전액 장학생도 반드시 '0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등록금 이외 지원 장학 : 학기 중 계좌이체 지급

장학별 문의처

장학명	문의처
우정장학, 계속장학(임시/보훈/북한이탈주민/ 경희가족/고시/장애학생 등)	학생지원센터(장학) (02-961-0045-0046)
우수장학, 밝은사회장학(단과대학), 실기장학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밝은사회장학(총학생회)	학생지원센터(학생) (02-961-0047)
밝은사회장학(신문방송국)	신문방송국 (02-961-0094)
밝은사회장학(중앙도서관)	중앙도서관 (02-961-0072)
밝은사회장학(학군단)	학군단 (02-961-0085)

개인정보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마지막 매듭

관리주체 전문성 키우고 개인정보에 대한 의식 제고해야

김성수 기자 korseep@khu.ac.kr
한진석 기자 1_jinseok@khu.ac.kr

우리학교에서 실무부처, 학생회 등 정보관리 주체의 부주의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우리학교가 2019년도 대학알리미 정보공시에서 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 분야에서 ‘양호’ 등급을 획득한 것과 대조되는 결과다. 이에 정보관리 주체가 개인정보관리에 대해 전문성을 갖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학알리미 공시에서는 ‘양호’ 실무 행정의 섬세함은 ‘미흡’

우리학교 정보보호 시스템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온라인 강의학습 시스템 ‘KLAS’와 지난 9월 새로 만들어진 ‘경희톡’부터 허점이 존재했다.

정보보호 학술동아리 ‘쿠리그’의 이준오(기계공학 2016) 씨는 “KLAS와 경희톡에서 따로 허가받지 않고도 학번과 같은 개인정보를 찾아낼 수 있었다”며 “심지어 예전 종합정보시스템에서는 로그인 정보 유지를 위한 ‘쿠키 값’에 실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돼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씨는 “우리학교 웹사이트의 취약점을 발견할 때마다 정보처에 제보해 보완을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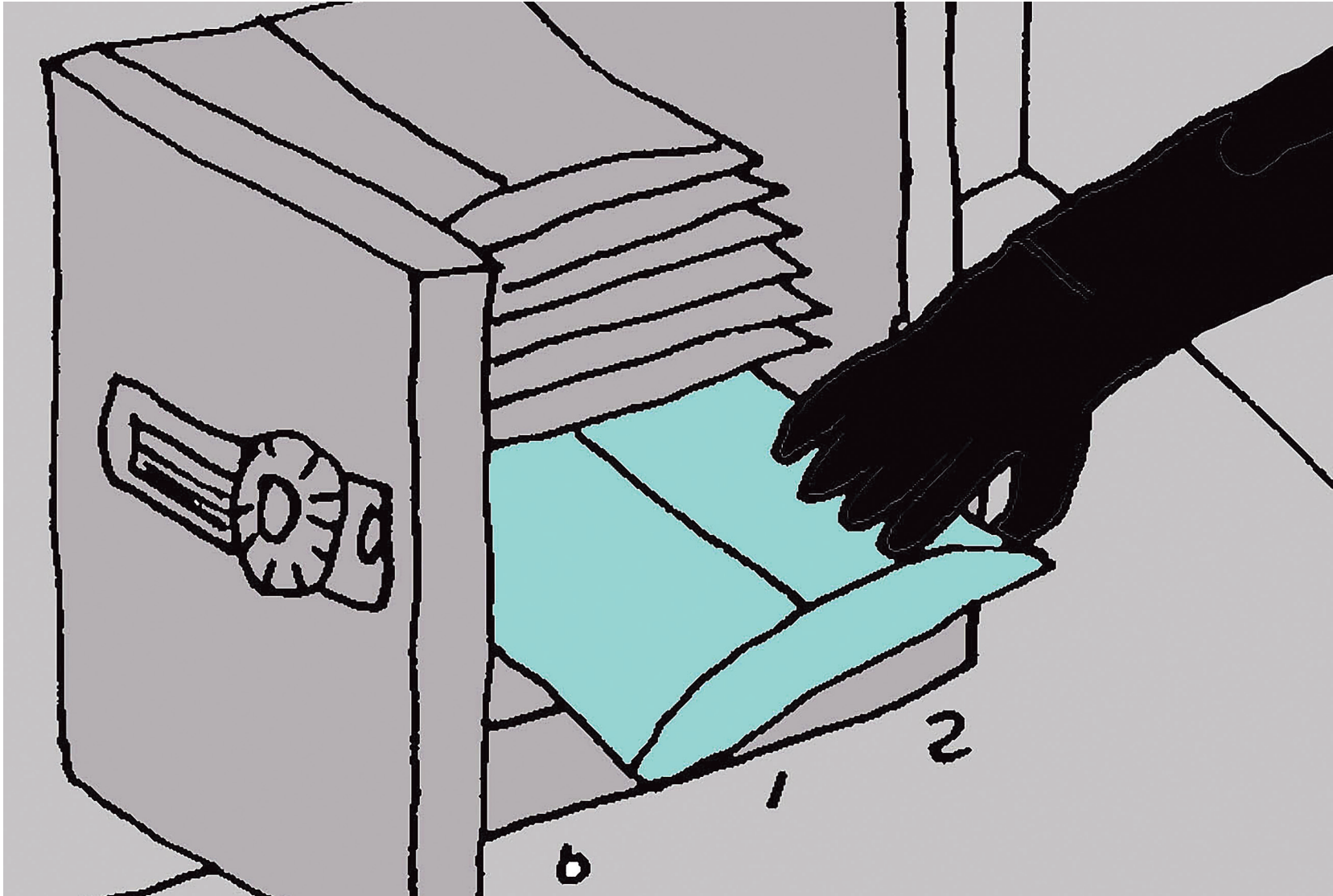
소프트웨어융합대학(SW대학)에서 정보보안 연구를 담당하는 허의남(컴퓨터공학) 교수는 “시스템적으로 완벽한 보안은 존재하지 않는 만큼 취약점 개선을 위한 학교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수집 단계에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온라인 신청 게시판에서 실명이 공개되는 사례도 있었다. A단과대에서는 장학 신청을 위해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A단과대의 장학신청서류에는 ▲성명 ▲연락처 ▲계좌번호 등 장학금 지급을 위한 기본 정보와 함께 보호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를 함께 작성해야 한다.

A단과대 행정실 측은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이유에 대해 “연말정산 시 장학금 수령 액만큼 세금 공제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행정적인 이유에서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다”며 “서류를 살펴보면 세금 공제에 대한 법률 안내와 ‘동의함’에 체크할 수 있는 공간까지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우리학교 전산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보호자 정보를 서류에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2016년 행정안전부에서 발행된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개인정보 수집이 과도하고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동의를 요구하는데 대해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계약의 체결·이행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온라인 게시판에서는 실명이 외부에 그대로 공개되는 사례도 있었다. B장학을 신청하기 위해 장학 게시판에 신청서를 업로드 한 K씨는 “장학 신청을 위해 작성한 게시물에서 실명이 공개돼 당황스러웠다”며 “지난 학기에 이름을 가려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아직도 그대로인 것 같다”



정보 보안은 관리 주체의식이 형성될 때 완성된다.

(사진 = 중앙일보 DB)

고 말했다. 실제로 B장학 게시판의 ‘글쓴이’ 목록에서는 신청 학생의 실명, 학번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게시물은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누적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국제캠퍼스 정보처 정보기획팀에서 개인정보관리를 담당하는 허웅 직원은 “해당 부서에 관련 법률 근거 및 목적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는지에 대해 확인해보겠다”며 “목적 외의 불필요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면 최소한의 정보 수집 원칙에 벗어나므로 수정이 필요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과도·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개인 신상정보 유출 심각

우리학교에서 관행처럼 사용되고 있는 학번·점수 형태의 전체 학생 성적 공지 방식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유유진(컴퓨터공학 2016) 씨는 “성적 공지를 출석부 명단 순서로 정렬해서 공지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름이 아닌 학번으로 공지됐다 하더라도 누구의 점수인지 다 알 수 있다”고 말했다.

SW대학 허의남 교수는 일률적인 성적 공지가 아니라, 각 학생마다 고유한 비밀번호인 ‘비공개키’를 받아서 자신의 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허 교수는 “공개된 정보에서 유출될 수 있는 정보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정보가 필요하다”면서 “온라인 게시판에서 실명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값이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보보호 시스템과 함께 발전해야 하는 것은 정보관리 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의식이다. 하지만 우리학교에서는 정보관리 주체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학교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를 종합해보면 실무부처, 학생회와 같은 정

보관리 주체의 부주의에서 시작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 3월 C단과대 행정실에서 진로상담교수배정을 위한 안내 메일에 학생들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가 기재된 엑셀파일이 함께 송부됐던 사례가 있었다. 이후 행정실은 사건의 경위를 설명한 사과문과 함께 파일 삭제를 부탁하는 메일을 학생들에게 전달했다. C단과대 학생 K씨는 “메일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상황에 대해 전달받은 후, 별도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며 “후속 조치도 학생들에게 자발적으로 지워달라고 요청하는 것 외에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신입생환영회(OT)에서 학생회의 부주의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도 반복됐다. 지난 2월 D단과대 학생회는 동아리연합 단체 채팅방에 버스자리 배치를 위해 이름, 전화번호가 포함된 명부를 공지한 사례가 있었다. 또 E단과대에서는 OT 출석여부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가 담긴 명부를 사용하고 행사 후 이를 계속 강의실에 방치하기도 했다.

우리학교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제보를 남겼던 D단과대 동아리 임원진 L씨는 “학생회가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고발하기 위해 글을 올리게 됐다”며 “학생회가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개개인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개인정보는 소수 인원의 사소한 부주의만으로 쉽게 유출될 수 있다. 실무부처, 학생회 등 정보관리 주체의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전문성이 더욱 요구되는 이유다.

실무부처 직원들은 개인정보관리에 대한 규정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우리학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근거를 두고 있는 규정에는 ▲고등교육법 ▲특수교육법 ▲도서관법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

한 시행령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학교보건법 등 담당 부처와 개인정보 처리 목적에 따라 상이했다.

정보기획팀 허웅 직원은 “교내 개인정보보호 관련 학칙으로는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 대응 시행세칙, 정보보안 규정이 존재한다”며 “최신 법령 내용을 반영해서 정보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및 활동보고 등의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무부처 팀장 S씨는 “직원들이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관련 규정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S씨는 “정보보호 교육을 들어도 ‘내 상황’에 알맞게 적용하기가 힘들다”면서 “딱딱한 규정보다는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분석한 매뉴얼이 확립되면 직원들이 참고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 매뉴얼 ‘경직’ 유연한 매뉴얼 필요

이러한 실무부처 직원들의 고충을 정보처에서도 인지하고 있다. 정보기획팀 허웅 직원은 “매년 진행되는 개인정보 교육에 더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실무에서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고 정보보호 교육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SW대학 허의남 교수는 “정보보안은 정보보호 시스템뿐만 아니라 관리 주체의 의식이 형성될 때 완성되는 것”이라며 “미국의 경우 사회 전반적으로 법에 대한 신뢰가 구축돼있고 담당자들은 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 교수는 “담당자들이 조금 불편을 느끼더라도 개인정보에 대한 의식이 생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 중앙일보 대학평가 세부 지표 분석

대학 특성 못 살리는 지표…내실 기하는 ‘참고’ 삼아야

2018, 2019 중앙일보 대학평가 세부지표 순위 추이

교수연구(8→8위)

	2018	2019
교수당교외연구비	11(9.3)	13(8.8)
교수당자체연구비	8(7)	11(6.2)
국제논문피인용	8(14.5)	16(12.2)
국제논문게재	9(7.8)	10(7.8)
인문사회국내논문게재	23(2.8)	24(2.7)
인문사회국내논문 피인용	27(5.1)	17(5.5)
인문사회지역서발간	7(3.7)	13(3.2)
인문사회지역서피인용	37(1.7)	29(2)
과학기술교수당 기술이전수입액	10(5.7)	9(5.5)
과학기술교수당 산학협력수익	32(3.7)	27(4.1)

교육여건(5→6위)

	2018	2019
교수확보율	1(13)	1(13)
등록금대비장학금 지급률	31(6.6)	30(6)
강의규모	51(0.7)	46(0.4)
등록금대비교육비 지급률	31(2.6)	29(2.6)
세입대비기부금	14(2.6)	16(2.6)
기숙사수용률	25(3.8)	21(4.3)
학생당도서자료 구입비	17(3.7)	18(3.5)
외부경력교원비율	42(1.5)	34(1.8)
외국인교수비율	24(2.5)	24(2.3)
외국인학생비율	4(8.6)	2(8.4)
외국인학생다양성	34(2.4)	38(1.9)
교환학생비율	5(8.3)	6(7.7)

학생성과(11→14위)

	2018	2019	
순수취업률	26(7.6)	22(8.3)	
유지취업률	9(10.9)	17(8.8)	
중도포기율	12(6.8)	12(7.4)	
창업교육비율	1(10)	1(10)	
지표 개편	졸업생 창업활동	14(5.3)	-
	학생창업 지원및성과	-	30(3.1)
현장실습참여학생비율	21(5.9)	12(6.8)	

평판도(9→7위)

	2018	2019
신입사원으로 뽑고 싶은 대학	9(8.1)	7(6.4)
입학을 추천하고 싶은 대학	9(7.2)	8(5.7)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대학	9(3.7)	7(3.6)
국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가 큰 대학	9(3.2)	10(3.0)
자녀 진학 선호대학 (신설지표)	-	8(2.9)

(괄호 안은 점수)
2018년 57개, 2019년 50개 학교 대상

김수혁 기자 sherk@khu.ac.kr

#. 우리학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종합순위 6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학교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순위의 현실적합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이 평가 자체가 학교 운영에 영향을 준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우리신문은 단순한 순위평가 결과 보도를 넘어 숫자로 표현된 여러 지표들이 우리 학교 곳곳에서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숫자가 말해주지 않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 허와 실에 관해 방학 기간 대학주보 온라인 홈페이지(media.khu.ac.kr/khunews)에 연재 기획을 발행할 예정이다. 우선 지난해와 올해의 상세한 평가정보를 바탕으로 등락이 두드러진 세부지표에 관해 짚어봤다.

중앙일보에서 평가 기준으로 사용하는 몇몇 정보는 종합 순위 등과 함께 보도를 통해 간략하게 소개된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그 내용이 지나치게 간소해 개별 학교의 자세한 평가내용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중앙일보 대학평가팀은 정책 운영 참고자료 목적으로 각 학교에 평가 근거가 된 세부지표별 성적과 지표 산정 기준을 포함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신문은 외부기관 대학평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조정처 학술진흥팀의 도움을 받아 자료를 검토해 봤다.

먼저 영역별 등락 추이를 살펴보면 ‘교수연구’ 영역은 그대로 8위를 지켰고 ‘평판도’ 영역이 9위에서 7위로 상승했다. 반면, 교육여건 영역은 지난해 5위에서 6위로, ‘학생성과’ 영역은 11위에서 14위로 하락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점수를 산정하는 ‘평판도’ 영역은 설문조사라는 특성상 정밀함이 떨어지고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올해 평가 방식에 변동이 있었지만 근본적인 틀은 바뀌지 않았다. 지난해 ‘평판도’ 영역은 기업 및 정부부처 인사담당자에게 묻는 ‘신입사원으로 뽑고 싶은 대학’, 고교 교사에게 묻는 ‘입학 추천하고 싶은 대학’, 기업 인사담당자와 고교 교사에게 묻는 ‘향후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대학’과 ‘국가 지역 사회에 기여가 큰 대학’ 4개 지표로 구성돼 우리학교는 모두 9위를 기록했다. 올해에는 학부모에게 묻는 ‘학부모 진학 선호 대학’ 지표가 추가됐다. 또 발전가능성 지표와 국가 지역 사회 기여도 지표에 학부모 설문 결과를 추가했다. 우리학교는 신설된 ‘학부모 진학 선호 대학’ 지표에서 8위를, ‘신입사원으로 뽑고 싶은 대학’과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대학’ 지표에서 두 계단씩 상승했지만 ‘국가 지역 사회에 기여가 큰 대학’ 지표에서는 한 계단 하락했다. ‘교육여건’ 영역은 결론적으로 순

위가 하락하긴 했지만 점수 상으로는 56.9점에서 55.2점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우리학교는 이 영역 중 ‘교수확보율’(1위), ‘외국인학생비율’(2위), ‘교환학생비율’(6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강의규모’와 ‘외부경력교원비율’에서는 하위권을 기록했다. ‘강의규모’ 지표는 온라인 강의를 제외하고 전체 개설된 강의 가운데 소수 정원 강의가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다. 지표 계산식은 ‘(20인 이하 강의 수)×2+(21~50인 강의 수)×1/(전체 강의 수)’로, 정원이 20인 이하인 강의에 가중치를 준다. 그런데 정원 21명부터 50명까지를 차등 없이 묶어 정원 규모 구분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단순하다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우리학교는 올해 후마니타스칼리지에서 재도약 개편을 통해 필수교과인 인간의 가치탐색, 세계와 시민의 수강정원을 기존 4~50명 규모에서 25명 선으로 조정했지만 이 지표상으로는 무의미한 변화인 셈이다. ‘외부경력교원비율’ 지표의 계산식은 ‘(최근 5년간 임용한 외부 경력 교수/최근 5년간 신규임용 교수)*100’이다. 이 계산식의 외부경력 교수란 대학 알리미에 공시된 산업체 경력 교원을 의미한다. 이 또한 오랫동안 학교에 몸담고 학생들을 가르쳐 온 경험보다 외부경력을 높게 평가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외부경력 가운데서도 시민사회단체 활동이나 정

부 부처 경력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기준이 교육여건을 가능하다는 취지에 맞는지 의문을 남긴다. 한편, 우리학교는 ‘외국인학생비율’과 ‘교환학생비율’ 등 이른바 국제화 지표에서 높은 성과를 거뒀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교육여건’ 영역에 포함돼 있는 ‘외국인학생의다양성’ 지표에서는 50개 학교 중 38위를 기록해 비교적 낮은 순위를 보였다. ‘학생성과’ 영역에서는 지난해 ‘창업교육비율’과 ‘현장실습참여학생비율’ 두 지표의 개선이 우리학교의 비약적인 순위 상승을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리학교는 두 지표에서 지난해 1위와 2위, 올해 1위와 12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창업교육비율’ 지표의 변별력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창업교육 강좌를 이수한 학생의 비율을 나타내는 ‘창업교육비율’은 20%를 상한선으로 두고 이를 충족하면 만점으로 본다. 그런데 올해 기준으로 조사 대상 50개 학교 가운데 무려 18개 학교가 만점을 받아 공동 1위로 집계됐다. 우리학교는 창업교육으로 집계되는 강좌가 주로 전공과 연계되지 않는 후마에 개설돼 있고 상대적으로 강의 질이 낮은 온라인 강의도 포함된다. 학술진흥팀 이진호 교수는 “아무래도 창업교육은 최근까지만 해도 우리학교에서 크게 중점을 두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한 지표상 결과와는 달리 전공 연계 부족 등 아쉬운 부분이 있는게

사실이다”라면서 “창업교육비율 지표는 관계자들 사이에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어 곧 사라지거나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언론사 대학평가가 대학 운영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는 주장에 대해 “학교 내부에서 신경 쓰지 않던 부분을 지적하는 등 그런 측면이 아예 없다는 못하겠지만 대학 운영을 특정 방향으로 고착시킬 위험성도 병존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언론사 대학평가에서 사용하는 정량지표들이 결국은 돈을 어디에 얼마나 많이 썼냐를 보여주는 것이다”라면서 “현재 순위를 유지라도 하려면 곧 지금의 지출구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말이고 그렇다면 대학의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운영 변화도 힘들어지게 마련이다”라고 말했다. 언론사 대학평가의 문제점은 대학 안팎에서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여전히 입시철이 되면 대학들을 일렬로 줄 세운 평가 결과가 대대적으로 보도된다. 각 대학들은 종합평가부터 세부평가까지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골라내 홍보에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얼마 전 있었던 우리학교의 총장후보자 토론회에서도 많은 후보들이 대학평가 순위를 유지, 상승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언했다. 결국은 대학 스스로가 언론사 대학평가의 지속 기반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마음이 아픈 학생입니다. 나쁜 학생이 아닙니다

교수칼럼

백종우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대학생 정신건강이 위기라고 한다. 실제 5년 사이에 우울증 진료 인원이 20대에서 2배로 늘었다. 다른 연령과 비교가 불가능한 수준이다. 우리나라 만 그런 것은 아니다. 타 선진국의 우울증 유병률은 한국의 2배 이상이다. 현재 20대가 가지는 어려움은 이전 세대와는 확연히 다르다. 산업화, 핵가족화 등의 변화는 20대 우울증 유병률을 높여갈 수밖에 없다. 문제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있나는 것이다.

2007년 경희대학교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한 그해에만 자살시도로 응급실에 온 6명의 본교 학생들을 만났다. 스트레스 요인은 성장 과정의 트라우마, 학업, 취업, 대인관계와 이성관계 등 매우 다양했다. 우울증과 적응장애, 조울증 등 여러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들은 쉽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다.

이유는 ‘알고도’ 또는 ‘몰라서’였다. ‘몰라서’는 고통을 스트레스상황에 따른 것으로 생각했지, 질환으로 인한 고통이라는 사실을 누구도 알려준 바 없었기 때문이었다. ‘알고도’는 고통을 겪고 있었지만 불이익에 대한 염려와 편견의 장벽을 넘지 못한 것이었다. 실제 이들은 교수님과 동료에게



사회적 편견의 장벽이 높아 정신건강을 치료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사진 = 중앙일보 DB)

어려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하지만 학업에 의지가 부족하거나 책임감이 없는 사람으로 오해받게 되자, 입을 닫고 있다가 극단적 시도를 한 것이다. 아픈 학생들이 나쁜 학생들로 여겨지고 있었던 것이다.

다행히 외부 편당을 통해 한 명의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두고 2008년 대학생우울증지원센터를 열었다. 전화상담, 방문상담을 시작했고 23명의 학생에게 정신건강평가를 제공했고 상담으로 충분한 경우는 학생상담센터로 안내하고, 치료가 필요하면 본원 또는 주변의 클리닉으로 연계하고 지원했다. 문화제와 영화제 등 이벤트로

정신건강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보려 했다. 2009년 이후 동대문구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하면서 이월했다.

그때 한 세미나에서 어느 교수님으로부터 외국의 사례를 듣게 되었다. 미국유학 중 예정에 없이 빨리 아이를 출산하게 된 그는 학업과 육아부담에 너무나 힘들었다고 한다. 점점 잠이 오지 않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공부에 집중을 할 수 없었다.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나고 극단적인 생각마저 드는 상황에서 학교상담센터를 찾았다. 상담센터의 벽에는 커다란 글씨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왜 이제 오셨어요?’라고 적혀있었다. 해당 글을 보니 눈물

이 났다고 한다. 심리 전문가, 정신과 의사는 한국인으로서는 처음 도전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과도한 책임감에 공감해주었다. 그들은 “당신은 ‘치료’가 아니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도와줄 사람이 있느냐는 물음에 한국에 계신 어머니가 떠올라 급하게 도움을 청했다. 그 결과 위기를 잘 넘기고 현재는 한국에 돌아와서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얘기였다.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고등교육기관의 자살예방시스템을 의무화하고 있다. 실제 1998년 자살예방을 국가적 과제로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자는 미 의회결의안이 통과된 것은 대학생 자

녀를 자살로 잃은 부모들이 만든 민간 자살예방재단의 노력이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가져온 결과였다. 미주한인을 대상으로 자살예방을 위한 노력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에스터 하 재단’도 비통한 딸의 상실을 애도하며 다른 사람들은 이와 같은 비극을 겪지 않기를 원하는 부모의 기부로 시작됐다.

국내에서도 서울대학교에서 진행하는 ‘학부생 전수 정신건강 온라인검사’에 따르면 휴학과 성적 저하와 가장 관련 있는 지표는 우울척도였다. 서울대학교는 학생상담센터와 보건진료소의 정신과 진료를 강화했다. 여러 학생들의 안타까운 자살이 이어졌던 카이스트를 비롯한 전국의 과학기술대학은 모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하여 상담센터와 함께 상담, 치료, 사후개입과 예방을 진행하고 있다. 경희대학교의 상담시스템도 온라인 예약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있고 유학생의 치료와 상담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어도 편견의 장벽이 높다면 무용지물이다.

미국 연수 중 정신과에 진단서를 받으러 온 몇몇 대학생이 있었다. 그들은 취업 면접을 위해 진단서를 요구하며 “미국은 우울증이 있었는데 현재 극복했다는 진단서가 있으면 오히려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정신건강 문제는 누구라도 경험할 수 있다. 이제 아픈 사람이 나쁜 사람으로 오해받지 않고 언제나 쉽게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한다.

교수사회의 변화를 위해 - ⑥

교수의 총장선출 권한 박탈과 교수선발권 이양



김종인(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 김종인 교수는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학 내부의 불합리를 절실히 체험했다고 말한다. 그는 내부자이자 관찰자로서 그간 직접 보고 겪은 문제들을 알리기 위해 칼럼을 연재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총 6회 분량의 연재가 계획돼 있다.

※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가공인대학원생제도와 국가공인 박사제도가 정착되면 장기적으로 대학교수 선발에서 유능한 학자가 배제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제도가 갖추어지더라도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한다. 그 때까지 대학을 지금의 교수 길드의 손아귀에 두게 할 수는 없다. 교수 길드를 약화시킬 수 있는 가능한 조치들부터 취해야한다.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사실상 교수들의 손에 의해 총장이 선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교수들은 대학의 주인이 아니다. 교수들이 단독으로 혹은 교직원과 결탁하여 총장을 선출한다는 것은 노동자조합에서 회사의 대표이사를 선출한다는 것과 같다. 이것은 사회주의에서도 있을 수 없으며 윤리적으로 부당한 일이다.

윤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영 논리상으로도 옳지 않다. 자신의 자본을 투자하지 않은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회사를 운영하게 되면, 그 회사의 운영상 일차적 관심은 회사 영업이익이 아니라 노동자들 이익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회사는 회사의 장기적 이익을 위한 투자나 기술개발 등에 노력을 기울일 수가 없게 되고, 나태하고 무책

임한 회사 직원에 대한 제재도 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결국에는 시장에서 도태되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대학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교직원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관이어서도 안 된다. 대학은 사회적 공익을 추구해야 하는 기관이다. 그런데 교수를 비롯해 대학에 고용된 사람들 손에 학교 운영의 수장인 총장이 선출된다면, 총장은 사회적 공익이 아니라 자신을 뽑아 준 교직원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교직원들의 이익과 상충해 미래 지향적 교육을 위한 투자를 할 수가 없게 된다. 교수사회 길드체제의 저항만으로도 어려웠던 학과 통폐합 같은 일은 원초적으로 불가능하게 되고, 대학은 사회적 요청과 무관한 구태의연한 교육만 이어가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는 교수 채용을 할 때 교내 교수들이 채용 심사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교수들은 전문직 노동자로 고용된 사람이지만, 하청을 받은 감독자들이 아니다. 학과 교수들이 교수선발권을 가지면서 생기는 앞서 거론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들이 가지는 교수선발권은 대학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과 부정의의 근원이다.

교수 선발의 과정은 학교 외부 인사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 맡길 필요가 있다. 이렇게 구성된 심사위원회에는 채용 분야의 전공자들이 들어가야 하겠지만, 전공자들로만 구성해서는 안 된다. 전공분야 밖의 학자들이 들어서 폐쇄적인 전공자 사회의 인적 관계에 의한 편파적인 심사를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전공자들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면 한국 학계의 좁은 인적 바탕으로 인하여 결국 아는 사람 밀어주기 선발이 될 수밖에 없다. 한국 학계는 너무나 좁아서 전공자들끼리는 학계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때문에 특정 대학의 학교 교수들이 아니라 전국 단위에서 교수들 가운데서 심사자를 뽑아 심사를 하는 경우에도 심사자들은 자신이 심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 이러한 실정은 한국의 모든 학술 연구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사업에 응모한 연구의 선발심사에 들어 가보면 누구나 알 수 있다.

전공분야 외부의 위원들의 심사 능력에 의문을 가질 수도 있으나, 절대 그렇지 않다. 후보자의 연구능력과 강의 능력은 전공자들도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학문적 훈련이 된 사람이면 학

문 일반의 관점에서 연구실적의 질을 평가할 수 있고, 강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후보자와의 사적인 교류가 없었으므로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있다.

또 교수 채용 심사위원회에는 학생위원도 반드시 참가시켜야 한다. 학생들이야말로 진정으로 훌륭한 교수가 선발되기를 바라는 이들이다. 영터리 교수가 선발되었을 때 가장 피해를 보는 이들이 학생들이다. 그러므로 학생들이야말로 교수 채용에서 가장 큰 발언권을 가져야 할 이들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학생들은 전문적 지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또 사회 경험의 부족으로 후보자에 대한 심층적인 판단력이 부족할 수 있다. 그것이 우려된다면 학생위원들에게는 심사권은 주지 말고 관찰자로서만 참가하게 해도 된다. 학생위원이 참가하는 것만으로도 심사위원들이 한통속이 되어 영터리 심사를 하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연재칼럼 목차〉

1. 강사법 시행과 총장 선출
2. 대학의 주인은 재단이나 교수가 아닌 사회
3. 대학교수들의 구시대적 권리 행사
4. 교수 길드의 전근대적 폐쇄성, 대학교육 낙후
5. 교수 길드의 해체를 위한 국가공인박사제도
6. 교수들의 관습적 권한을 폐기해야 한다

인터뷰

“이제는 새로운 총장과 함께 미래를 가꿔나가야 할 때”

박영국 총장 직무대행 인터뷰

이후승 기자 hooseung.lee@khu.ac.kr

지난해 11월 24일 학교법인 경희학원은 박영국 대외협력부총장을 총장 직무대행(대행)으로 임명했다. 당시 박 대행은 “새로운 총장이 선출되기까지 대학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한편 그 과정이 민주적인 방식으로 축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약 1년이 지났고 현재 새로운 총장은 선임되기 직전 단계까지 왔다. 그리고 총장 직무대행의 임기가 마무리 되어가는 지금, 박 대행은 “이제 새로운 총장과 함께 역동적으로 우리학교의 미래를 가꿔야 한다”며 그 동안의 소회보다는 앞으로 우리학교가 나아가야 하는 미래를 이야기 했다.

박 대행은 ‘총장 직무대행’ 자리에 앉아있는 동안 ‘어떻게 하면 우리학교 학생의 교육 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놓지 않았다. 박 대행은 앞으로 우리학교의 교육 여건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양질의 연구가 이뤄져야 하고 평균에 매몰된 교육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행은 “대학 경영의 최우선 가치는 연구 역량이다”며 “연구도 없이 가르친 학생을 어떻게 사회로 보낼 것인가”라고 말했다. 박 대행은 연구 역량을 강화해 학생의 사회 진출을 원활하게 만들고 사회가 탐내는 인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점이 바로 우리학교가 지향하는 ‘문화세계의 창조’에도 부합한다는 것이다.

우리학교에서 연구가 원활하게 이뤄지는 학과로 정보디스플레이학과를 꼽으며 “좋은 연구를 통한 교육의 결과는 기업과 사회가 졸업생을 부르는 것”이라며 “정보디스플레이학과



“연구 역량 강화를 통한 학생의 학습권과 사회 진출 향상이 대학 교육에 대한 나의 믿음”

졸업생이 ‘LG’라는 대기업에 많이 진출하는 것이 바로 연구 역량과 직결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연구 역량 강화를 통해 학생의 학습권과 사회 진출을 향상시켜줘야 한다는 것이 대학 교육에 대한 나의 믿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박 대행은 평균 중심의 교육에서 이제는 탈피해야 한다고 말한다. “학생의 강점을 살려주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교육의 방향이다”며 “성적이 잘 나온 과목과 잘 나오지 못한 과목을 굳이 평균으로 산출해 주력할 수 있는 분야의 진출을 막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빠르게 나는 독수리, 웅맹하게 땅을 누비는 사자, 유연하게 수영하는 상어처럼 각자 가지고 있는 강점을 보완해줘야지 지금과 같은 교육 방식이 지속된다면 평균적으로 모든 분야를 보통 수준으로 할 줄 아는 ‘청둥오리’를 만들게 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교육 여건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연구 역량 강화와 앞으로 우리학교가 나아가야 할 교육의 방향 이외에도 박 대행은 총장 선출의 마무리와 재정, 위상 향상을 강조했다. 박 대행은 “가장 중요했던 민주적 총장 선출을 제외한다면 우리학교의 위상을 높이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에 주력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대행은 당초 계획에 부합하는 재정 건전성 확보 실패에 아쉬움을 표했다. “재정 확보를 하지 못한 점은 안타깝지만 그래도 재정의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위상을 높이려는 노력 또한 재정과 결부되어 있었다. 박 대행은 “위상과 재정은 뗄 수 없는 부분”이라며 “위상이 올라간다면 국가사업 수주가 수월해지고 이는 재정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위상을 올리는 방법의 핵심이 바로 연구 역량 강화라고 말했다.

박 대행은 임기 동안 가장 중요한 학내 사안이었던 총장 선출에는 자량

스러운 점과 아쉬운 점이 공존했다고 언급했다. “선거 기간 동안 후보자 간 비방이 없었던 것과 존중을 잃지 않았던 점이 굉장히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모든 후보자가 공정하게 자신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해왔다는 것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다만 “구성원의 합의가 늦게 이뤄짐에 따라 촉박하게 진행된 일련의 과정 속에서 나온 불안감과 이 때문에 제작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추측성 통신문이 지나치게 많았다”며 아쉬운 점을 짚었다.

박 대행은 임기 동안 대다수 교수가 보여줬던 합리적 의견과 학생이 학내 여러 사안에 보여준 성숙함 및 책임감에도 감사를 표했다. “직무대행 임기 동안 대다수 교수님의 굉장히 합리적인 방식으로 표현된 여러 의견이 현재 총장 선출까지 도달하는데 큰 동력이 됐다”라고 말했다. 또한 “성공적인 총장 후보 추천 과정 속에서 나타난 학생의 합리적 제안과 양보 또한 경희의 역사에 기록될 만큼의 가치 있는 일이었다”며 “학생의 이런 모습이 경희대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현재 모습에 자긍심을 느끼게 해 줬다”고 강조했다.

박 대행은 구성원에게 “우리학교는 올해 개교 70년 이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잘 헤쳐 왔다”며 “그 길을 성공적으로 헤쳐 왔고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낸 저력으로 학교 발전, 위상과 재정을 탄탄하게 하는 일련의 발전 과정을 통해 대학 본연의 임무인 학술과 교육에 꽃이 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에 더해 “학생의 학습 환경이 극대화되고 국내 어떤 대학보다 좋은 학습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이러한 동력을 대학 발전에 이어갔으면 한다”고 마무리했다.




2019학년도 2학기 강의평가 실시 안내

2019학년도 2학기 강의평가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모든 재학생은 강의평가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평가결과와 강의방법 및 강의내용 개선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므로 정확한 평가를 위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1. 기간 : 2019. 12. 2.(월) ~ 12. 23.(월)
- 2. 대상 : 서울·국제 캠퍼스 재학생(학부 및 대학원생)
- 3. 대상강좌 : 학부 및 대학원 전체 개설 강좌
- 4. 성적 열람 및 공시 기간 : 2020. 1. 2.(목) ~ 1. 6.(월)
- 5. 강의평가 실시 여부에 따른 성적조치 기간
 - 강의평가 실시 학생 : 2019. 12. 16.(월) ~ 12. 27.(금), (단, 12. 24. ~12. 26. 제외)
※ 성적입력이 완료된 강좌에 한함
 - 강의평가 미실시 학생 : 2020. 1. 2.(목) ~ 1. 6.(월)
- 6. 강의평가 실시 방법
 - 1) 경희대학교 포털 접속 → 수업/성적 → 수업 → 강의평가 클릭
 - 2) 강의평가 강좌 목록에서 강의평가의 [작성/조회] 클릭
 - 3) 화면 상단의 답변방법 설명에 따라 설문문항을 모두 답변한 후, 강좌에 대한 개방형 질문(자유의견)을 입력하고, 하단의 [저장] 단추 클릭(저장 후 수정 불가)
 - 4) 강좌목록 화면에서 평가를 마친 과목이 [미실시]에서 [실시]로 변경된 것 확인
 - 5) 실시한 과목의 평가내용을 다시 보고 싶을 경우에는 강좌를 클릭하여 조회
 - 6) 목록에 있는 다른 강좌들도 같은 방법으로 모두 강의평가 실시
 - 7) 강의평가 강좌 목록에서 모든 강좌가 [실시]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 후 화면 하단의 [로그아웃]을 클릭하여 강의평가 종료
 - 8) 강의평가를 잘못 실시한 경우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의 강의평가담당자에게 문의
※ 강의평가는 공정성을 위하여 익명으로 진행됩니다.

교무처 학사지원팀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온라인 접수 공고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무시험검정서류를 접수하고 심사한 후 교원자격증을 아래와 같이 발급하고자 하오니 신청바랍니다.

- 1. 대상자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2019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2020.02. 졸업)'
- 2. 무시험검정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9.11.25.(월) ~ 12.06.(금)
 - 접수방법 : 인포21에서 신청
※ 인포21 로그인 → 수업/성적 클릭 → 교직 || 교원자격무시험검정 클릭 → 무시험검정 신청 내역 확인 후 “신청” 클릭 → “확인” 클릭
- 3. 제출서류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소정양식) 1부 : 인포 21 신청
 - 보건교사(2급) 무시험검정신청자는 간호사면허증 사본 제출
 - 영양교사(2급) 무시험검정신청자는 영양사면허증 사본 제출
- 4. 유의사항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접수하지 않은 경우 교직과정을 이수하였더라도 교원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음
 - 재학 중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교직팀으로 문의 바람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접수하고, 무시험검정 및 교내 졸업사정에 합격한 학생에 대하여만 교원자격증이 발급됨
- 5. 문의처
 - (서울) 교직팀 02-961-9668, teacher@khu.ac.kr
 - (국제) 교직팀 031-201-3049, teacher02@khu.ac.kr

교무처 교직팀

기업 현직자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직무 이야기!

2019 하반기 미래인재센터 직무/업종탐색 집중교육 '잡(Job)담(談)'

12.2(월) ~ 12.6(금), 매일 16:30 ~ 18:30

- 1) 대 상 : 해당 직무/업종에 대해 탐구하고 싶은 2~4학년 본교 학생 누구나!
- 2) 모집인원 : 일자 별 **선착순 40명!** (교육비 무료, 출석협조전발급가능)
- 3) 신청기간 : 강좌 별 진행일 1일 전까지 (ex. 금융직의 이해: 12.2(월) 23:59까지 신청)
- 4) 신청방법 : 구글폼 신청 (우측하단 QR코드로 접속) * 1인당 1강좌만 신청 가능!!
- 5) 구글폼 신청 URL : <https://forms.gle/wz96u1K1m2nEjHpH6>
- 6) 비교 : 5강좌 '전부 수강'은 가능하며, 희망 시 '이메일(job@khu.ac.kr)'로 신청 (출석률 100% 달성 기준, 메일명: 잡담 전과제 신청_이름_학번)
- 7) 문의 : 서울캠퍼스 미래인재센터 (02-961-0167)

회차	일자	강의실	교육내용	현직자 소속
1회	12/2(월)	청운관 620호	영업/영업관리직의 이해	혁신제품제조사
2회	12/3(화)	청운관 620호	금융직의 이해	SC 제일은행
3회	12/4(수)	청운관 620호	외국계 기업의 이해	AP Search (전 : 존슨앤드존슨)
4회	12/5(목)	청운관 509호	마케팅직의 이해	전 : 제일기획
5회	12/6(금)	청운관 620호	공기업의 이해	한국 HR연구소



신청하기 >



KHU 미래혁신원 미래인재센터(서울C) x 경희대학교 LINC+ 사업단 LINC+